



나라재정 보기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4 2022
Vol. 64

FIS 인사이트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재정관리의 필요성

재정칼럼

국민의 안전과 재정

재난과 국가재정: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CONTENTS

www.fis.kr

2022. April
Vol. 64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261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04 FIS 인사이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재정관리의 필요성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2 재정칼럼

국민의 안전과 재정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재난과 국가재정: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발생할 수도...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재정
NOW



2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6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30 키워드 재정
반도체

34 해외재정동향
OECD 중기 경제전망

재정
STORY



42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누구의 눈에 맞추어 재정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자료 분석 사례

48 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54 재정사상의 변천
사회철학자, 분배정의론
존 스튜어트 밀의 재정사상

60 재정 캘린더

6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67 애독자 코너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재정관리의 필요성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2022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굵직한 재난은 국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2019년 가을에 시작되어 2020년 봄에 진화된 대규모 호주 산불, 2022년 1월 통가 해저 화산폭발 등 국제 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은 광범위한 지역에 물리적, 경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재정은 재난위험이라는 거대한 해일 아래 위치해있다. 재난위험 발생 시 국가적 피해를 줄이고,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서 재난 영향의 평가, 사용 가능한 예산의 확인,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을 위한 재정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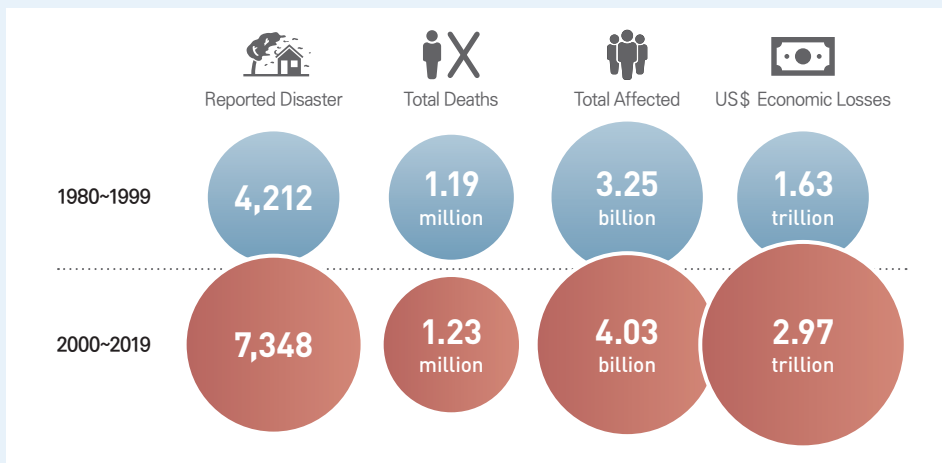
1.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위험 증가

자연현상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그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은 국민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비롯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등 점차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재난에 따른 피해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재정적 비용 역시 따라서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의 <지구기후보고서 2020>에 따르면, 온실가스 농도, 해양 산성화, 지표면 온도, 해양 온난화, 빙하, 빙해역, 해수면 상승 등 기후지표 7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홍수, 가뭄, 한파, 혹한 등 극한 기후 현상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이 발표한 <2000~2019년 재난 인적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7,348건의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20세기 후반(1980~1999년)에 발생한 자연재해(4,212건) 대비 74.5%나 증가한 수치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했다. 20세기 후반 1조 6,300억달러였던 금액은 21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조 9,700억달러로 늘어났다.

〈그림 1〉 국제적 재난발생 현황



자료: UNDRR. (2020.10.). The human cost of disasters: An overview of the last 20 years(2000~2019)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양상은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조 1,519억원이며, 복구비는 피해액의 3.3배에 달하는 7조 4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고에서 충당한 복구비용은 지방비 1조 2,867억원(18.3%), 자체복구비 1조 2,393억원(17.6%)보다 약 3배 더 많은 총 4조 5,178억원으로 전체 복구비용의 약 64.1%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재난 역시 지난 5년간 발

생한 인명피해가 2016년 44명에서 2020년 1,091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재산피해액 또한 2016년 626억원에서 2020년 3,342억원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재난피해에 대한 단기적인 복구비용 이외에도 재난지역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재난 추이 및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21.12.). 2020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2021.12.). 2020 재난연감

2. 재난위험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점점 발생 확률과 재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과 인구 밀집도에 따라 재난이 주는 자산 및 인명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졌다. 이로 인해 발생빈도가 적게 나타나더라도 한번 발생한 재난위험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대규모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인적·물리적 국가 재난피해의 증가는 단순히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준다.

〈표 2〉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정의 영향

거시재정	재정수입	공공지출	공공투자	공공재정관리
-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 - 국가채권의 발행 - 공공부채의 증가	국제무역 차질, 노동시간 저하, 생산손실로 인한 수익 감소	- 긴급자금지출의 증가 - 지방정부 지원	- 공공자산의 손실 및 피해 - 재건을 위한 예산 재할당	- 비효율적인 지출 발생 및 긴급지원의 투명성 부족 - 재난예산 이력시스템

자료: IDB. (2021). Fiscal Policy and Climate Change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기상이변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시재정, 수익, 공공지출, 공공투자, 공공재정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기상이변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에서 나타나는 재난 위험 요소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공통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거시재정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난상황의 증가는 재난위험에 대한 대응 및 피해 복구에 따른 지출 증가와 국가 생산시설 및 시스템 가동 중지, 주요 재정사업 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난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권의 발행과 공공부채의 증가가 뒤따르는 모습도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으로 인한 충격은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무역 불안정, 노동시간 저하, 생산손실은 국가재정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매년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태풍은 주요 생산시설과 수출입 항만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2015년 발생한 태풍 ‘차바’는 중공업, 정유화학 시설이 밀집해 있는 울산, 창원 등 주요 시설에 피해를 주어 생산 시설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했다.

공공지출 부분에서는 특히나 재난위험에 따른 재정부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긴급자금지출 증가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피해 발생 기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복구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복구계획수립 시 복구비용의 국비지원 선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재난 피해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재정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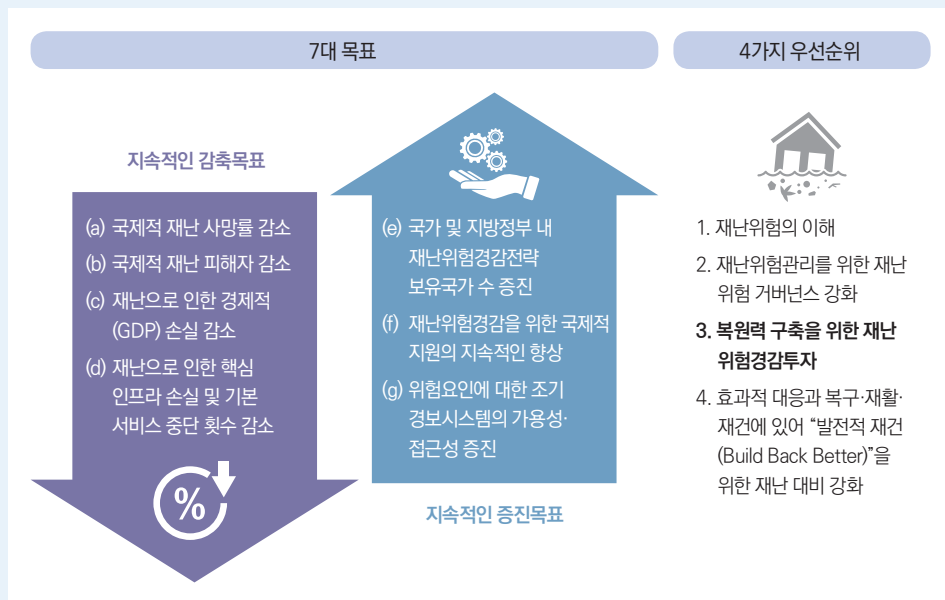
공공투자의 영역에서 재난위험은 공공자산의 손실과 피해를 가져온다.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집행을 저해하는 주요 집행부진 요인으로 자연재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 재건을 위한 예산 재할당도 국가 재정운영에 영향을 준다. 또한 재난 위험 발생으로 인한 긴급지출은 지원대상 선정의 중복수혜 여부 등 공공재정관리의 투명성 관리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재정은 국내 발 재난위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도 영향을 받는다. 해외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주요 생산자원공급 불안정, 식량가격 폭등, 주가·유가 변동은 국내 경제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듯 국가재정은 국내, 해외의 재난상황이라는 해일 아래 위치해있다.

3.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해외 재정 프레임워크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세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94년 제1회 요코하마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를 시작으로 2005년 효고 프레임워크를 거친 후,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FDRR 2015-2030,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UN 회원국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7개의 목표와 4가지 행동우선순위 조치, 38개의 이행지표를 실천해야 한다.

〈그림 2〉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의 목표 및 우선순위



자료: UNISD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특히 재난회복력을 위한 국가재정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재해위험경감과 관련한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개발(SDGs) 달성과 미래 위험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출영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행동우선순위 중 재난 회복탄력성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에서도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재난위험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는 재난피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난위험과 이로 인한 높은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재난에 대한 재정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위험관리와 재무전략 중요성의 국제적인 인식에 따라 G20 정상들과 OECD는 2012년 재난 위험평가 및 위험 자금조달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먼저 재난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위험에 대한 국가재정의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재난위험에 따른 자금조달과 대체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가 적절한 재정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3〉 G20/OECD의 재난위험평가 및 자금조달을 위한 프레임워크



자료: OECD. (2015). Disaster Risk Financing: A global survey of practices and challenges

세계은행(World Bank)의 재해저감복구국제본부(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GFDRR)는 재난위험재정(Disaster Risk Finance, DRF)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재난위험재정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재난과 관련된 재정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2020년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부」에 기반한 재난위험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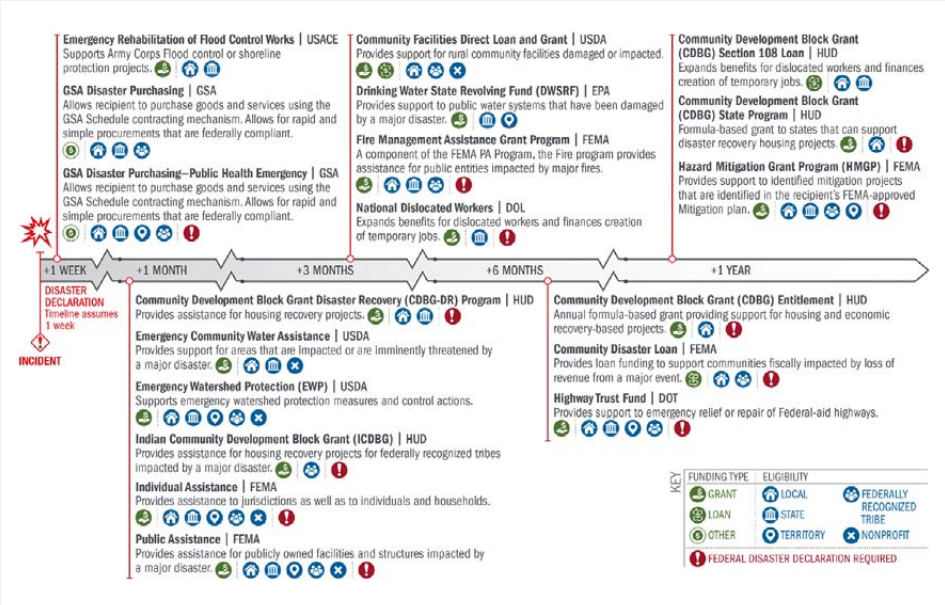
〈표 3〉 재해저감복구국제본부의 재난위험재정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주요 의사결정 도구	목적	내용
긴급자금 평가	- 재난 이후 잠재적 재정비용 추정 - 가용자금과의 실제 사용한 자금의 격차 확인 - 불확실성 파악	- 재난에 대한 예상손실 규모 파악 - 재난피해에 대한 자금부족 및 사용가능한 예산 확인
리스크 파이낸싱 평가 및 최적화	- 가용자금과 기타 재난재정전략 비교 - 경제적 기회비용 확인 - 재난재정전략 간 효율성 확인	- 재난대응 재정정책 효율성 파악 - 재난피해 이후 우발부채에 대한 관리
재정위기 대응	- 재난영향 대상자 예측 - 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적 비용 확인 - 안전망 프로그램 이외의 정책대안 비용 평가	- 재난 피해인원 예측 - 안전망 프로그램의 예상비용 - 안전망 프로그램 수혜대상 및 소진기간 예측 - 대체 프로그램과의 비교

자료: GFDRR. (2020). Disaster Risk Financing Analytics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효과적인 재난 재정관리를 통해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난 재정관리 가이드(Disaster Financial Management Guide)를 제작했다. 먼저, 재해가 발생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 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관리의 시기를 ① 재난발생 이전, ② 재난발생 이후 초기 ③ 재난발생 이후 장기적 관리로 구분했다. 또한 재난발생 지역의 재정운영 관계자들과 재해 복구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후 1주일에서 1년까지 시간 순서에 따른 관련 재난기금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그림 4〉 재난복구를 위한 주요 연방자금 지원 프로그램: 미국 사례



자료: FEMA. (2020). Disaster Financial Management Guide

4. 재난위험경감을 위해 재정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

앞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재정부담 요소들을 확인했다. 재난위험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재정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재난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대응 단계별 예산 규모와 지급시기 등 관련 재정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위험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관련 정보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데이터를 기반한 재난위험재정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난위험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다양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야 한다. 재난발생 이후 얼마나 많은 복구비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채권발행, 부채 증가 등 거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수입, 공공지출과 공공투자, 재난지원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 등 국가재정 운영의 다양한 부분에 재난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공·민간투자를 진행하고, 국제적인 재난위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재난위험에 취약한 인프라,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제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재난위험 문제는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위험이 국내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 역시 예의주시하며, 국제적인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재정관리 거버넌스에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행정안전부. (2021.12.). 2020 재해연보.
- 행정안전부. (2021.12.). 2020 재난연감.
- UNISD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 FEMA. (2020.4.). Disaster Financial Management Guide-Guidance for State, Local, Tribal & Territorial Partners.
- OECD. (2015). Disaster Risk Financing: A global survey of practices and challenges, OECD Publishing, Paris.
- WMO. (2021.4.19.).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0.
- UNDRR. (2020.10.). The human cost of disasters: an overview of the last 20 years(2000-2019).
- GFDRR. (2020). Disaster Risk Financing Analytics: New tools to support decision-making for emergency response financing.
- IDB. (2021). Fiscal policy and climate change:Recent experiences of finance minis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국민의 안전과 재정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물론 그 대상은 풍수해 및 지진 등의 자연재난, 그리고 교통사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 에너지, 교통, 통신 시스템의 마비, 전염성 질병 등의 사회재난을 포괄한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면(혹은 대비하여) 국가는 사전에

예방 및 대비, 사후에는 대응, 복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단계별 필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 팬데믹,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이 최근 수년간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심어주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물론 이 글은 국민 안전의 범위를 정의하거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체계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재해·재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안전 관련 부문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인식이 일정 규모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된 배경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적고자 한다.

1.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재정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비중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안전 관련 예산은 다른 재정소요사업과는 달리 그 성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의 속성상 안전 관련 예산은 사전 예방 및 대비 단계에 명시적으로 배분되기 마련이며, 이런 경우 지출의 성과를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전 예방 및 대비 단계에 대한 지출의 성과는 지출 규모나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 및 자율 역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 성과가 측정이 어렵거나 양자 간의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관련 지출항목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두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물론 현재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하에서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취합 검토한 후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관련 사업 내에서의 우선순위나 예산 비중이 조정되는 절차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타 예산 대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이 제도가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보이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업체계

다음으로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배분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업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사전 예방 및 대비의 임무를 주로 맡고, 중앙정부는 사후 대응 및 복구 등의 지원을 맡는다.



$$\text{재난 손실의 기댓값} = \text{재난 발생 확률} \times \text{재난 발생 시 손실 규모}$$

다른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위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기대손실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한정된 예산하에 추구해야 할 별도의 재정 목표가 있다. 그리고 분업체제 아래에서 지방정부는 사전 예방 및 대비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발생확률을 줄일 수 있고, 중앙정부는 사후 대응 및 복구지원을 통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사후 복구지원을 기대하여 지방정부는 사전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자원배분을 줄이고 이를 다른 재정소요에 충당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전 예방 및 대비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 관련 항목에 예산이 과소 배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인구조의 문제를 규제와 감시 기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역의 특성상 위험요인의 특성이나 발생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대해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량이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후 복구지원 규모를 해당 지방정부의 사전 예방노력과 연계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재난 발생 시 재난 예방 노력과 사후 복구지원 규모를 연계시킨다는 원칙이 한결같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3. 안전과 안정 사이: 생활안정차원에서의 피해 복구

2년을 넘겨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의 고통이나 그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활동의 제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치료를 위한 의료보전 대응 체계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엄밀한 의미에서 재난 발생 이후 일어난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피해 복구의 범위에 산정할 것이며, 이 중 얼마만큼을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재정 재해복구의 단계에서 생활 안전의 차원을 넘어 생활안정을 돕는 데까지 확대되기를 바라고 시작했다는 점이며, 이는 좋은 싫든 정책당국이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과정에서의 피해보상이 재정부담을 많이 증가시키거나 정부 대 민간의 정보비 대칭성이나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로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함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지니며 개별적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피해 복구지원은 2006년 이후 시행해 온 풍수해보험사업과 같이 일정 수준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이 예측이 어렵고 사회 전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에 대해서는 최후의 사회안전 보루로서 정부가 개입하여 재정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재난과 국가재정: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발생할 수도...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samuel@de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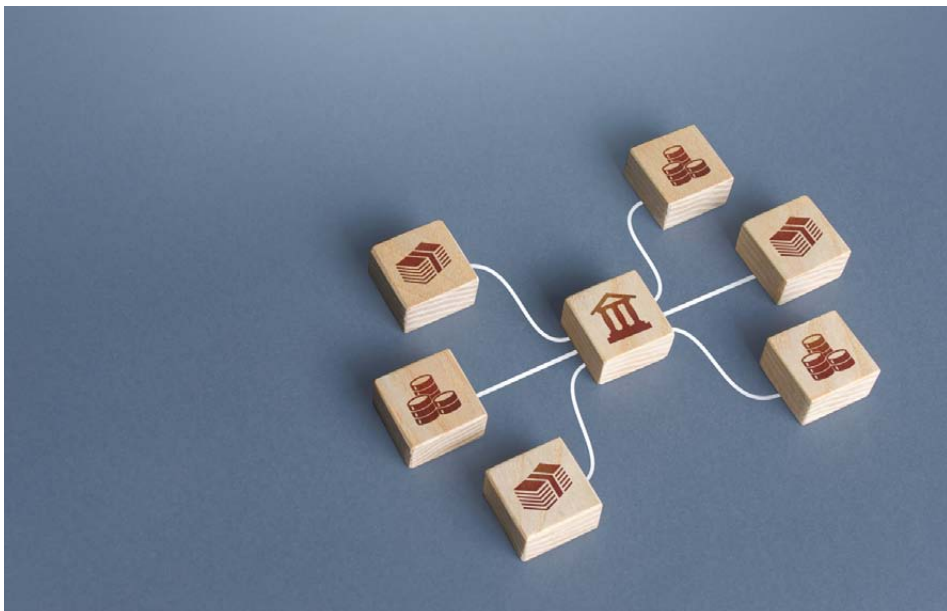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최근 수년간 급격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방역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료진, 공무원 등)과 물적 자원(각종 의료장비, 백신, 치료제 구입 및 개발 등)의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은, 역사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천연두는 아테네 문명이 몰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페스트(흑사병)는 중세 유럽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바 있다. 즉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국가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었고, 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금 반복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대처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 발생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출 등 재정적인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난 관련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이해되었으므로 국가 재난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필요한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에 관한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재난은 순수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이 강해,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어떤 개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인 비경합성(Non-rivalry)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인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때문에 국방, 치안 등과 함께 민간 시장(Market)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공공부문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황기인 현재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은, 케인즈(Keynes)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과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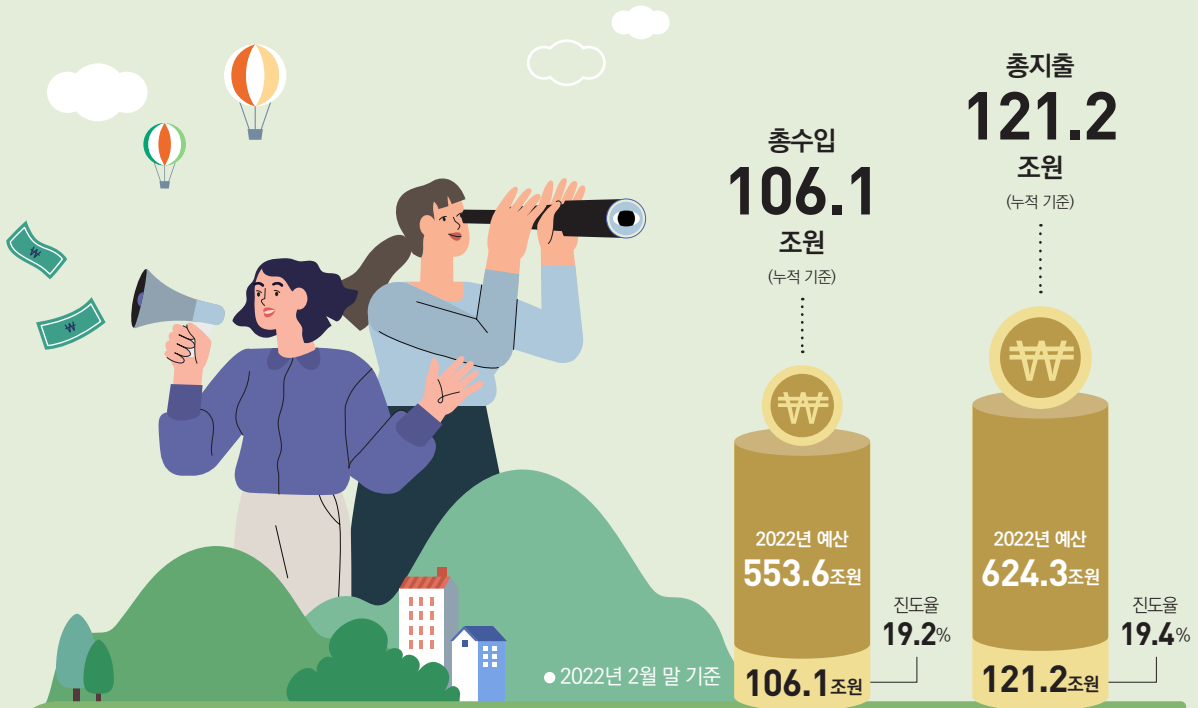
재난재정의 확보와 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재난에 대한 관심은 나라마다 기술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도출했고, 위험 수용수준의 선택도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거나 정치적 질문이라고 단정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난관리 선택이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니었다. 인간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가 재난재정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재난에 관한 국가의 재정지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재난에 관한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비재가 아닌, 투자재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에 소화기 1대를 비치하면서 몇 만원을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5년 이내(평균 교체기)에 사용하지 않고 교체하게 되면, 몇 만원이 사라졌다고 아까워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아까워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즉 재난에 대비한 지출을 단순한 소비로 볼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투자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국가 재난재정은 단기적 시각에서의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하인리히(H. W. Heinrich)의 고전적 도미노 이론을 인용해 보면, 1:29:300법칙을 하인리히가 제시했다. 이는 330건 중 무재해 사고는 300건, 경상인 29건, 중상이 나올 확률은 1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상 재해 저변에는 수많은 경상 재해와 무상해 사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중상해는 무수한 불안전 상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통계적으로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즉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보다 긴 시각에서 보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이고 재난이다. 터너(Barry Turner)의 재난배양 이론에서도 재난은 이미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난 발전의 초기 단계인 배양단계에서부터 사회 속에서는 재난이 잠재되어 누적되어 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터너도 마찬가지로 재난은 조금씩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대한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는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소비재가 아닌, 투자재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 예방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중요하다. 마치와 올슨(James G. March & John P. Olsen, 1984)은 기존 주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제도주의적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마치와 올슨은 사회 정치제도가 개인의 역할과 상황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제도가 개인의 정체성, 자아상, 그리고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총비용이라고 하면, 재난예방(대비 포함) 비용과 재난복구(대응 포함) 비용의 총합일 것이다. 이때 재난예방을 하면 할수록 재난피해는 줄어들게 되어서 큰 재난이 닦쳤을 때 재난피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재난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재난예방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계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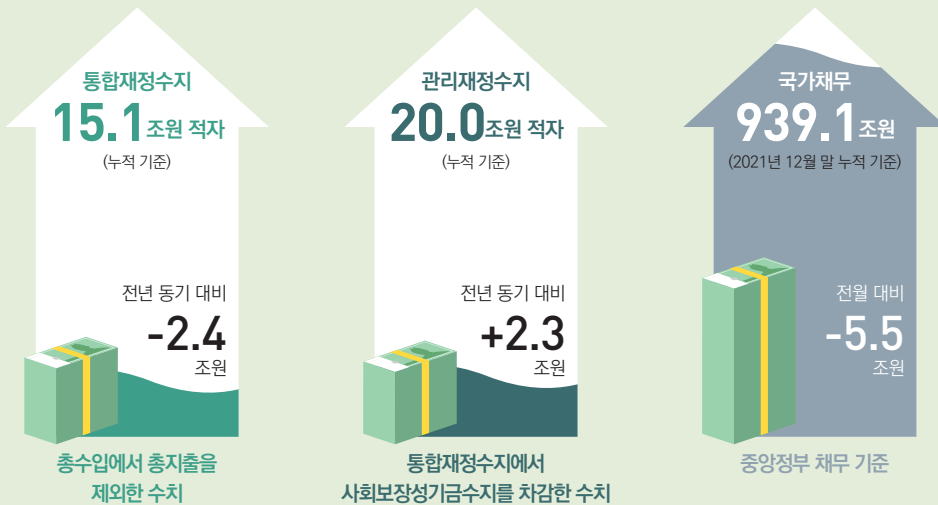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반대로 재난예방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피해는 커지게 되고 재난복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재난예방 비용곡선은 반비례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재난복구 비용곡선은 정비례 그래프이며, 이들 두 곡선의 교차점인 P1이라는 적절한 수준의 재난관리 비용 투입 지점이 생겨나게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P1 지점까지는 재난예방 비용을 투자해야,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피해를 크게 입으면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비용 지원을 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게 되어 오히려 재난예방 비용에 투자를 덜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야 더 큰 피해가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유리해지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칭펀드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평소에 재난예방 투자 비율을 감안하여,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 재난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비용 투자가 최우선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글.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주 1) 2021년 결산수치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산출하지 않음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2.4.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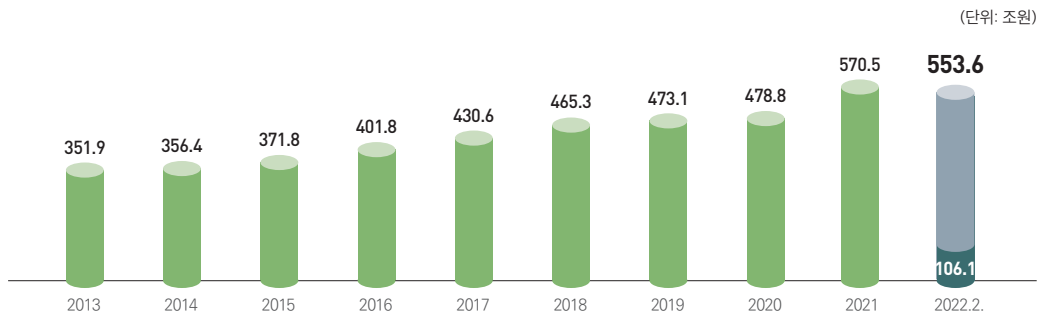
● 2022년 2월 말 기준

총수입
106.1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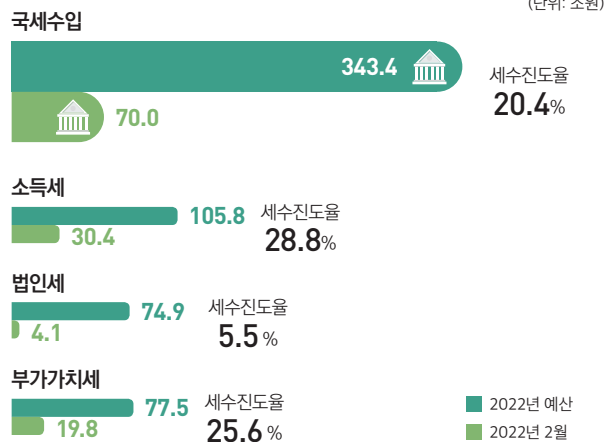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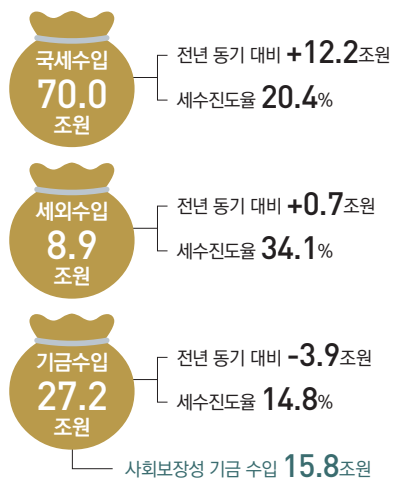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9.0조원

주: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추가경정예산(2.21. 국회통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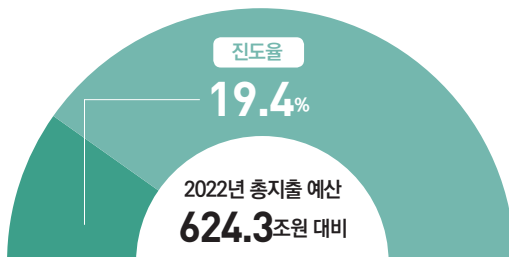


주: 세수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총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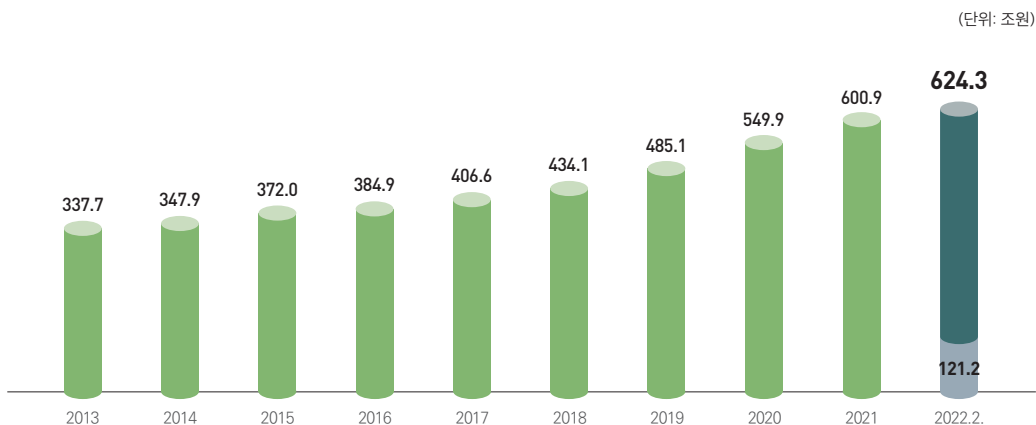
● 2022년 2월 말 기준

총지출
121.2
조원



전년 동기 대비
+11.4조원

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추가경정예산(2.21. 국회통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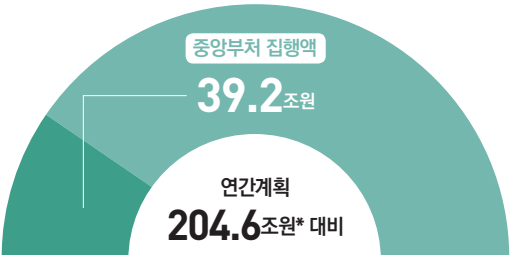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0.1조원**
진도율 **19.3%**

전년 동기 대비 **+11.5조원**
진도율 **19.6%**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 **10.9조원**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19.2%



전년 동기 대비

-3.1%p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63%) 기달성(68.2%)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 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관리대상: 46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39개 기금의 주요사업비
- 관리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진도율 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에서 사업별 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022년 기준)

구분	총지출(본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합계	-	607.7조원	-	204.6조원
중양부처	중앙행정기관 60개 기금 59개	607.7조원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금 39개	204.6조원
공공기관	-	-	-	-

※ 상세 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 가능

연도별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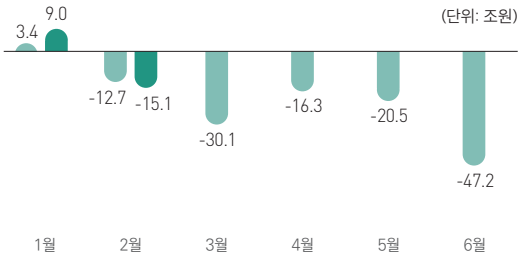
구분	연간계획 (본예산+이월액)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2016년	279.2	166.2	59.5	169.7	60.8
2017년	281.7	163.5	58.0	166.3	59.0
2018년	280.2	162.6	58.0	174.1	62.1
2019년	291.9	178.1	61.0	190.7	65.4
2020년	305.5	189.6	62.0	203.3	66.5
2021년	343.7	216.5	63.0	234.2	68.2
2022년	204.6	128.9	63.0	-	-

주: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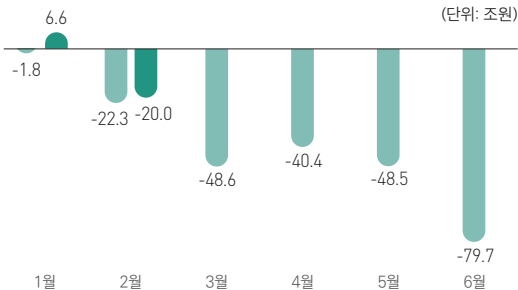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2년 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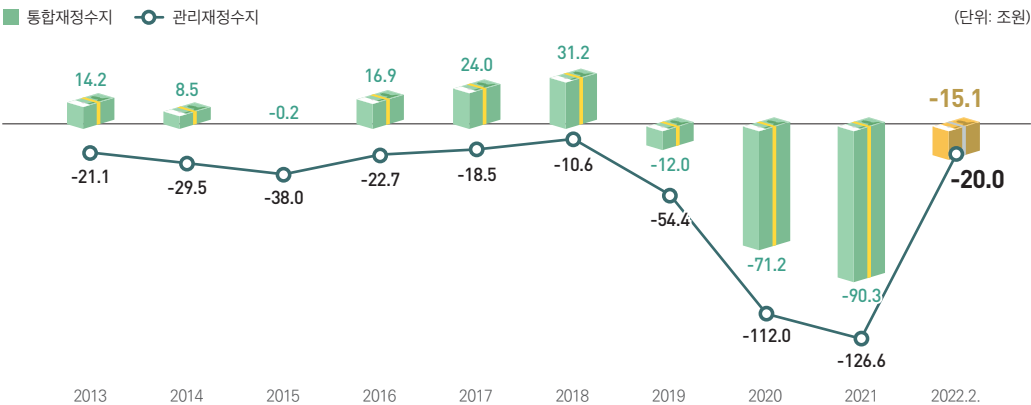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추가경정예산(2.21. 국회통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 가 채 무

●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월 대비
-5.5조원

전년 대비
+119.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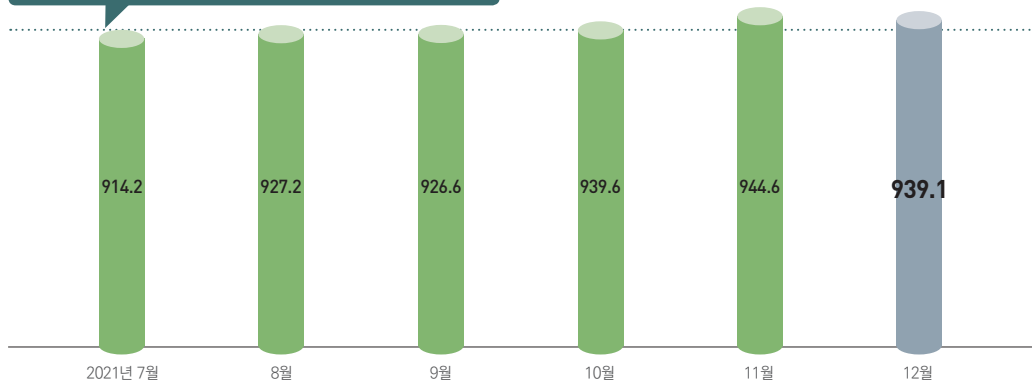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939.1
조원



* 2022년부터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수치는 분기별 제공 예정

2021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939.1**조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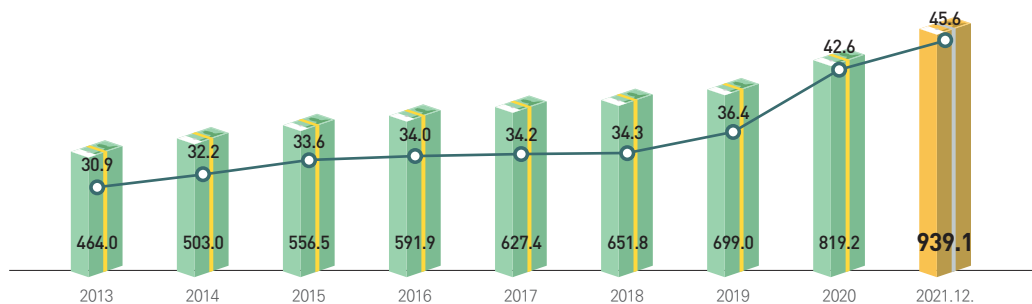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누적채무 ○ GDP 대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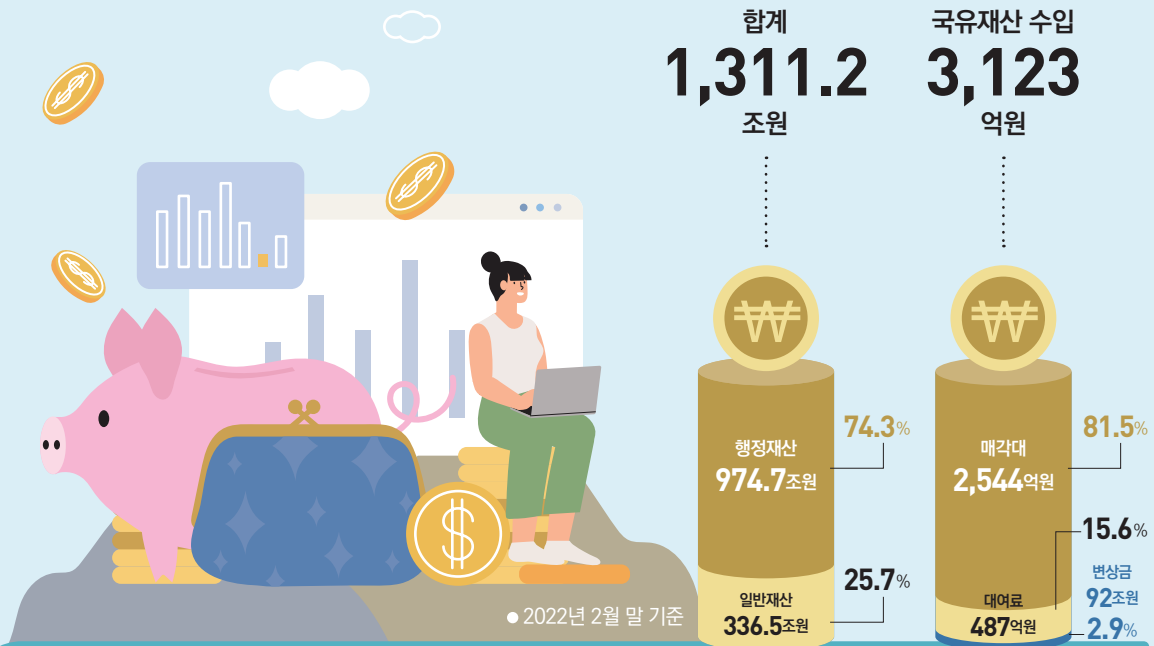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22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글.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국유재산 취득
8,038억원

국가가 매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토지
5,570억원
(69.3%)

건물
104억원
(1.3%)

기타
2,364억원
(29.4%)

국유재산 처분
480억원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토지
242억원
(50.4%)

건물
0억원
(0%)

기타
238억원
(49.6%)

*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보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www.k-p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 2022년 2월 말 기준

전월 대비

-0.7조원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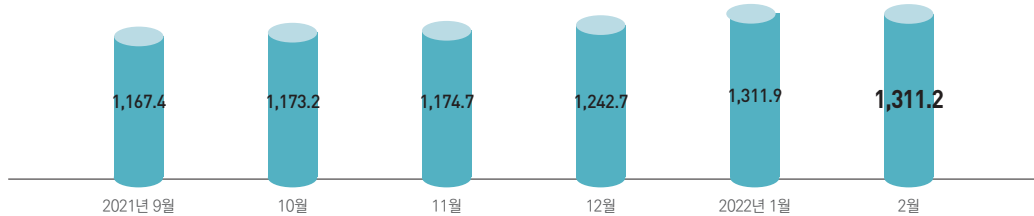
+152.4조원

국유재산
1,311.2
조원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단위: 조원)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

행정재산
974.7
조원



74.3%



25.7%

일반재산
336.5
조원

* 국가의 공공재산(청사, 관사),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기업용재산(정부기업 재산), 보존용재산(문화재 등)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단위: 조원, 잠정)

행정재산	구분	일반재산
591.3	토지	39.1
70.0	건물	2.2
301.3	공작물	0.2
1.2	기계기구	-
5.5	임목죽	2.1
3.7	선박·항공기	-
-	유가증권	292.9
1.7	무체재산	-

주 1) 공작물: 국유지 또는 국유건물에 부착된 철탑, 울타리 등 시설물

2) 임목죽: 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또는 대나무

3) 무체재산: 지상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국유재산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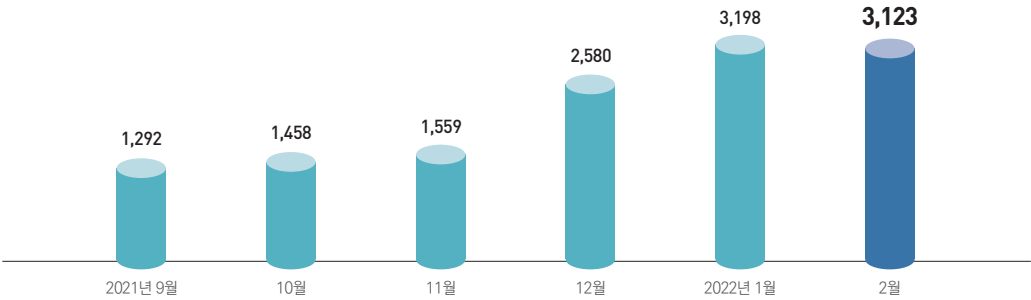
● 2022년 2월 말 기준

전월 대비
-7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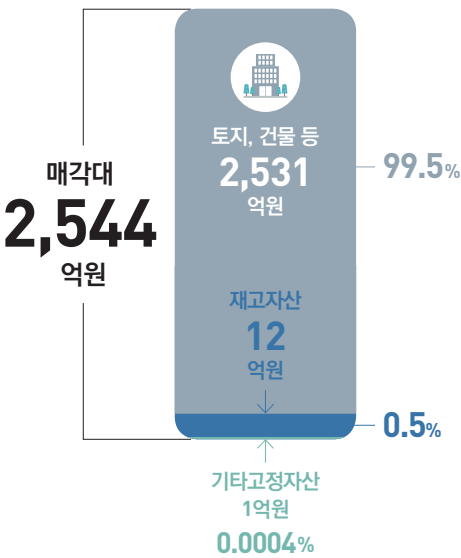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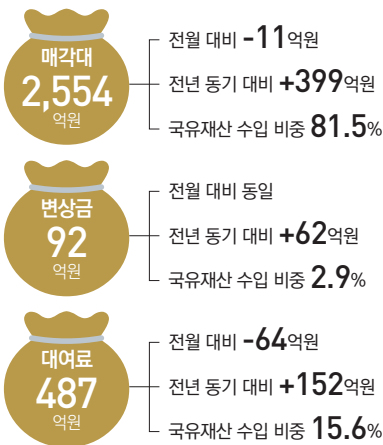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613억원



(단위: 억원)



주: 2021년 자료는 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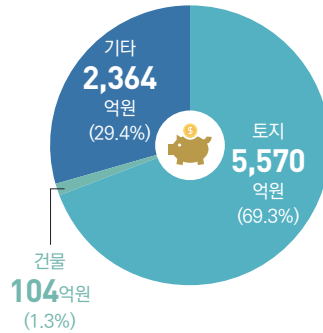


주 1) 매각대: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수납한 대금
2) 변상금: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국유재산취득·처분

● 2022년 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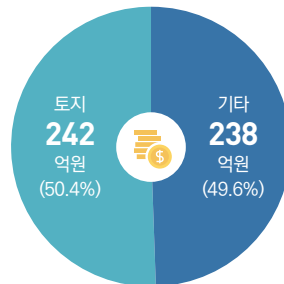
국유재산 취득
8,038
억원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2,825(100.0)	3(100.0)	5,210(100.0)
토지	576(20.4)	3(100.0)	4,991(95.8)
건물	46(1.6)	-	58(1.1)
기타	2,203(78.0)	-	161(3.1)

국유재산 처분
480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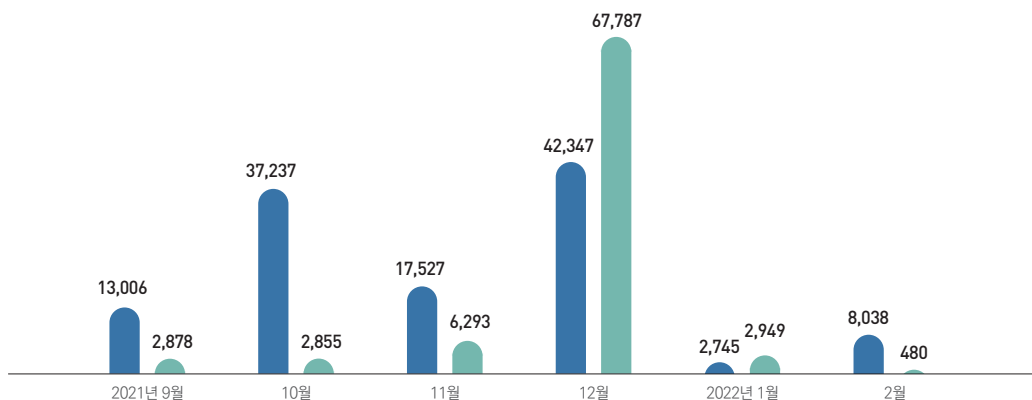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459(100.0)	2(100.0)	19(100.0)
토지	221(48.1)	2(100.0)	19(100.0)
건물	-	-	-
기타	237(51.6)	-	-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취득 ■ 처분

(단위: 억원)



반도체

이달의 이슈키워드

반도체

청와대
인구통계
여성
인권
불법
코로나19

학교
노동
인구 복지
학생
병원
부동산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3월 ‘반도체’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위치한 차량용 반도체 공장 가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전 세계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3월 16일에 일어난 일본 지진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어려움이 커져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는 ‘글로벌’, ‘부품’, ‘자동차’ 등이 도출됐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재정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연관어

글로벌

부품

자동차

기업

생산

투자

공급

기술

수출

제조

장비

소재

개발

러시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22.3.20.), 수집기간: 2022.3.1.~3.20.

주지하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도 세계 여타 완성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동차 생산량의 변화량을 통해 드러나는데, 2020년, 2021년 각각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2%, 1.3% 감소했다. 반도체 공급 문제는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농업 트랙터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일본지진 등 다양한 국제 문제들이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의 전략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등 정무위원,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책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2월 3일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¹」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후속조치인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²에는 앞서 말한 위원회 신설 외에도, △전략산업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 조치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구체화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³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한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2021년	2022년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1,788	1,842
통상분쟁대응	250	231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288	394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사업설명자료」 재구성

¹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고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²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³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직원 재교육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대학)이 국가, 지자체 또는 산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학부 학과를 의미한다.

반도체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앞서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신설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으로 전략산업 분야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전략산업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 위기, 각국의 수입규제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몇 가지 재정사업을 소개한다.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54억원 증액한 1,842억원을 2022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등 6개 분야에서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 40개 이상 품목의 자립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업화를 통한 국가 매출을 높인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속지원 △기업 협업형 R&D 추진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지원 강화 등이다.

첫째,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속지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소재산업의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R&D를 적시에 지원한다.

둘째, 기업 협업형 R&D 추진은 소재기업 중심으로 부품, 모듈, 시스템 등의 수요기업과 긴밀한 협업형 R&D를 추진하여 제조혁신을 이루는 소재산업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지원 강화는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전담기관과 사업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한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변경, 사업비 조정, 진도 점검,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연구개발은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진행되며, 과제당 연 50억원 내외의 규모로 6년 이내로 진행된다. 정부는 보호무역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공급안정과 국가산업 안보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통상분쟁대응

통상분쟁대응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상분쟁에 대응 및 관련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2022년 23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수입 규제 등과 같은 무역분쟁은 WTO 분쟁해결제도⁴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⁵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를 대상

으로 하는 수입규제는 미국 47건, 인도 21건, 터키 18건 등 총 206건이며,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 등 다양한 품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⁶도 WTO에 제소하여,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또한, 통상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 간 통상 이슈에 대해 국민이 접하기 쉽게 온라인 미디어,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현장소통도 진행하고 있는데, FTA 활용 중소기업, 통상 분야 구직청년, 국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통상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국우선주의와 일방주의 확산으로 급증하는 통상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통상정보 적시제공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무역구조상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지난해 대비 106억원 증액한 394억원을 2022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ODA⁷ 기술 교류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주요국으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조성, 광산지역 수은오염복구,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등의 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북방 정책의 주요국인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팜 산업기술혁신센터 조성, 친환경 농기계 보급 등 전자 및 농업 관련 ODA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ODA 수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4.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와 이를 집행하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로 구성되어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한다.

5.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할당제 등의 수단을 통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6. 2018년 미국 정부가 수입산 세탁기에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한 것을 의미한다.

7.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줄임말로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한다.

OECD 중기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OECD는 연간 2회(5월, 11월) 경제전망 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추가로 연 2회(3월, 9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를 발표한다. 이번 호는 지난 3월 17일에 발표된 「OECD 중기 경제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경제, 사회 영향, 정책 시사점(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연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kym21@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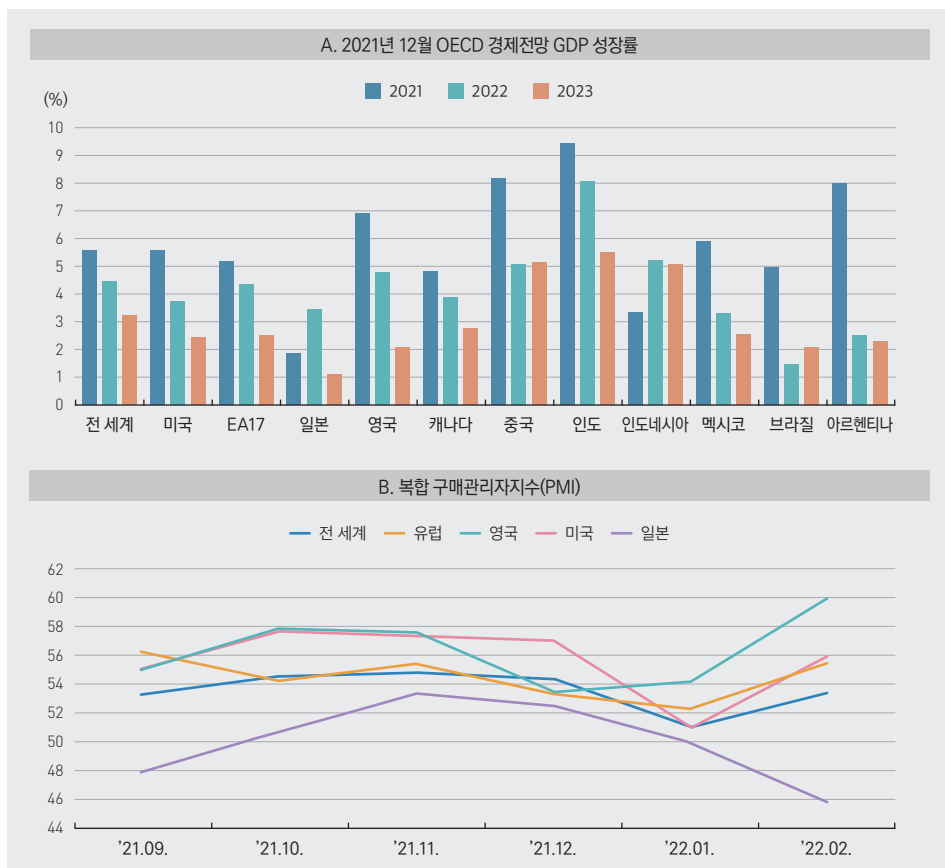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경제전망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2월에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서는 경제성장 회복을 예상하여, 세계 GDP 성장률을 2022년 4.5%, 2023년 3.5%로 예측했다(그림 1, A). 이는 전 세계 백신 접종의 노력, 주요 경제국의 코로나19 지원 등 거시경제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완전 고용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정책적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경제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미국, 남미, 중부 유럽, 동부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식품, 에너지, 팬데믹 관련 제약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물가상승이 가속화되었다(그림 1, B).

〈그림 1〉 전쟁 전 OECD 국가 GDP 성장률 전망치와 복합 출력 PMI



주: A의 EA17은 유럽의 OECD 국가들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함

자료: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4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세계 경제전망

세계 경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시장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전 세계에서 두 국가가 차지하는 GDP 비율은 약 2% 불과하며, 세계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두 국가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던 세계 경제전망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식품, 비료, 에너지, 금속 부문에서의 가격상승과 공급 차질을 유발했다. 둘째는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와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금융위기이다.

● 식품, 금속, 에너지 부문의 가격상승과 공급망의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 식품, 금속,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수출국이며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상품 시장에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충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 두 국가는 전 세계로 밀 30%, 옥수수, 광물질비료, 천연가스 20%, 석유 11%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밀 수입이 7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는 팔라듐과 배터리에 사용되는 아르곤, 네온, 항공기에 사용되는 티타늄 스펀지 등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매장량 또한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원료들의 가격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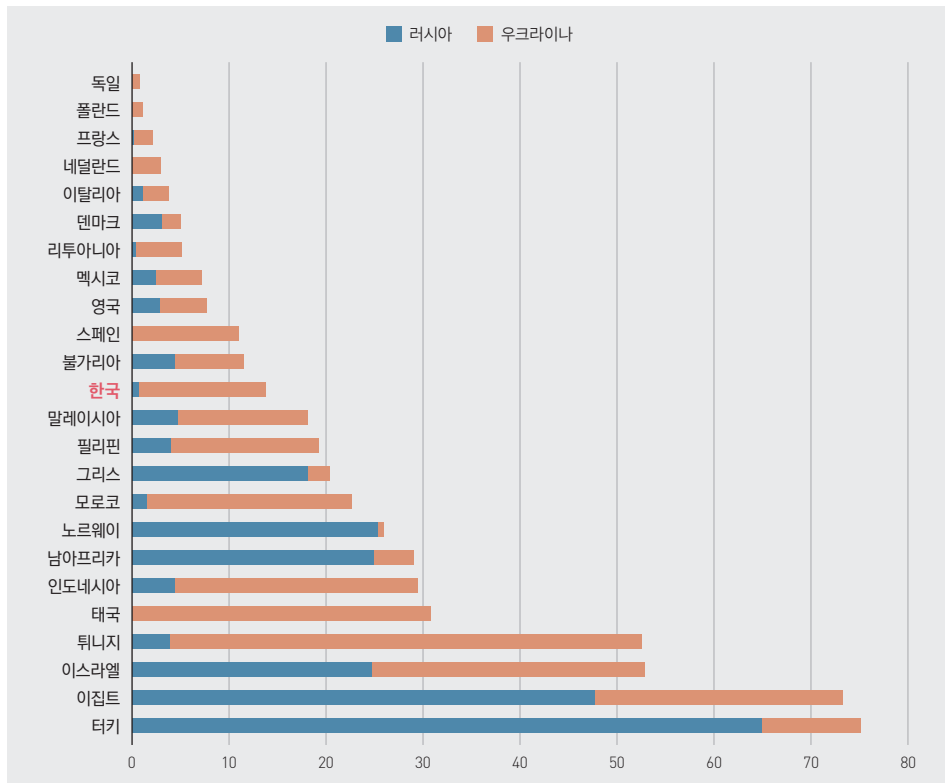
OECD에서는 전쟁 이후의 경제성장과 물가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경제 모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¹, 세계 유가 33%, 석탄 80%의 가격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스 가격은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유럽 85%, 북미 10%, 나머지 국가 20% 이상). 금속(구리, 금, 아연, 철광석, 니켈, 알루미늄, 팔라듐, 백금)은 가중 평균한 결과 11%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았다. 식품은 가중평균 6% 이상 인상될 것이며, 밀은 90%, 옥수수는 40%, 비료는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수출 중단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에서 EU로 수출하는 에너지가 중단되면 가스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유럽의 물가상승률이 1%p 증가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비료제조 중단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물가 인상에 더욱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비료제조가 중단될 경우, 다음 해의 농업 상품 공급에 영향을 주어 식품군 부족 사태가 더 오래 지속될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재난인 빈곤과 기아 급증에 영향을 줄 것이다.

1.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의 특정 상품의 평균 가격과 2022년 1월 평균 가격의 차이 비율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그림 2〉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밀 총수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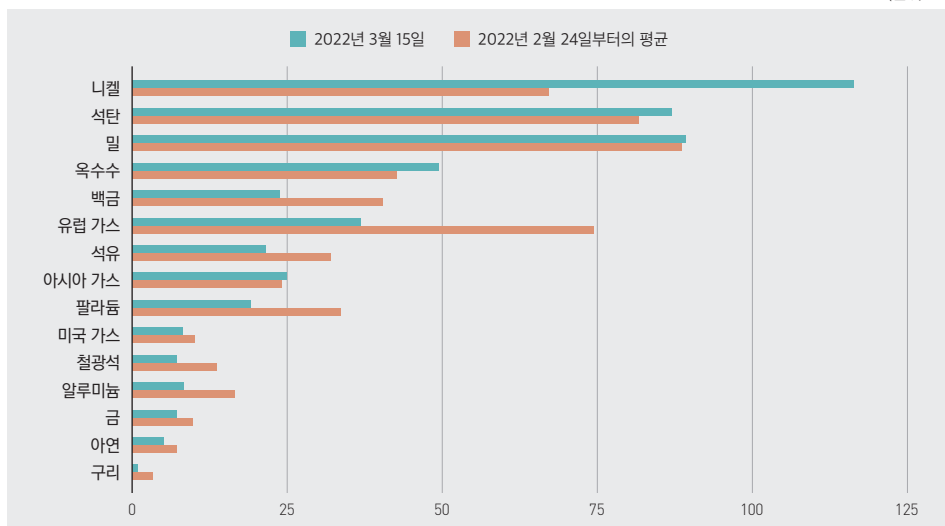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6

〈그림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후의 주요 수출 품목 가격상승률

(단위: %)



주: 2022년 1월 평균 가격 기준으로부터의 가격 상승률

자료: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5

● 폭발적인 기준금리 상승과 통화 가치의 하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의 경제적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금융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서방국가에서는 상업적 항공 여행, 화물 운송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영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이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개인과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고 러시아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 CBR)이 외환보유고 접근을 동결시켰다. 그 결과, 루블화 가치 하락과 기준금리 20%(10.5%p 상승)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국가부채에 대한 위험부담을 급증시키고 국제적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비교적 강한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신흥시장경제, 중앙 유럽 경제, 동유럽 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경제 모형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과 비교하여 미국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50% 하락될 것이며,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의 통화 가치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전쟁 이후 통화 가치의 충격은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환율 평가 절상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가 러시아를 배제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는 국제 지불 시스템의 분열로 이어져 시스템적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지배적이던 미국 달러의 역할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러시아 투자 위험 부담률이 약 1,000bps²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500bps, 터키 100bps,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50bps, 기타 모든 신흥시장경제에서 25bps의 투자 위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상품가격의 상승과 금융위기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세계 GDP 성장률 1%p 이상을 감소시킬 것이며, 약 2%p 이상의 물가상승을 예상했다(그림 4).

3. OECD의 정책 제언

● 재정정책: 난민 지원과 가계·기업의 충격 완화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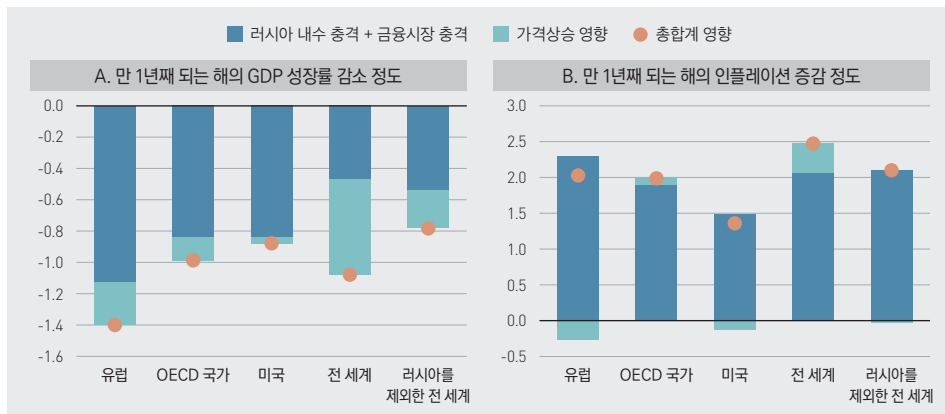
OECD 국가 정부의 재정정책은 추가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속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출될 부분으로는 유럽 난민 지원 비용,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경제의 충격 영향 완화 지원비용 등이 있다. 또한, 재정수입을 증가시켜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 상승이 가계소득에 주었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게 계획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발적으로 늘어난 수입에 과세를

적용하는 등 자금 조달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정정책 지원이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모든 회원국이 1년 동안 GDP 0.5%의 정부 지출 증가를 목표로 두면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서도 GDP 성장률 감소 효과를 약 절반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림 5).

중기적 재정정책으로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추가 재정지원의 범위는 신흥시장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며, 소득지원과 채무 지속 가능성, 투자자의 신뢰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전쟁 전과 발발 이후의 세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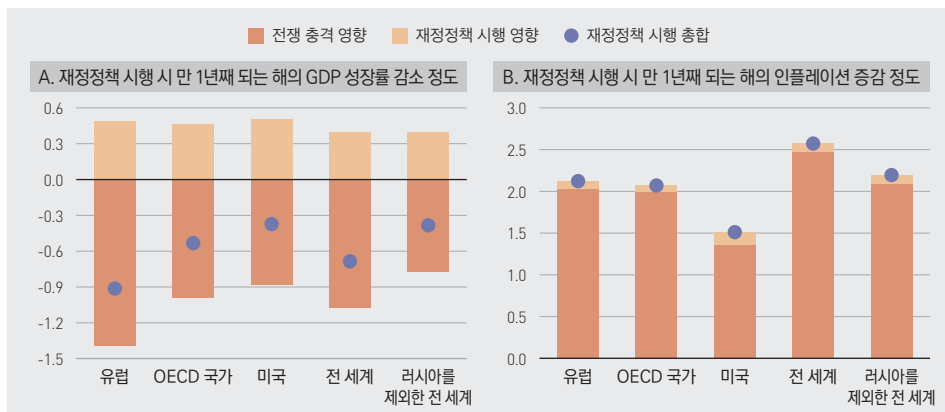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7

〈그림 5〉 재정지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충격 완화 효과

(단위: %)



자료: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11

2. 베이스스 포인트.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로 1bp는 0.01% 포인트이다. 수치가 클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화정책: 금융시장 유동성 완화와 선진국의 금융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필요

전 세계 물가상승이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를 평균 1%p 정도 상승시키고, 주요 신흥국은 평균 1.5%p 인상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고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성과 유동성 부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산매입 재개,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 은행 건전성 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선진국은 전쟁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다각도로 재검토하는 중이다. 미국은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적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나 최근 상품 가격급등으로 지속적 인플레이션 압력 징후를 보이고 있어 금융정책 정상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한편, 물가상승률이 낮고, 임금비용 상승률이 완만하며 전쟁의 악영향이 큰 국가일수록 금융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신흥국에서는 지난 1년간 통화정책의 기초가 대폭 강화되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부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 안전성과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주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정책: 에너지 공급 안전성 향상과 가격 안정화 정책 시행 필요

저소득 국가 가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와 식품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의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자국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행해왔다. 저소득 가구의 전기 요금 인하, 전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액체 연료 소비세 인하, 전기·에너지 가격 동결, 전력회사에 보조금 제공 등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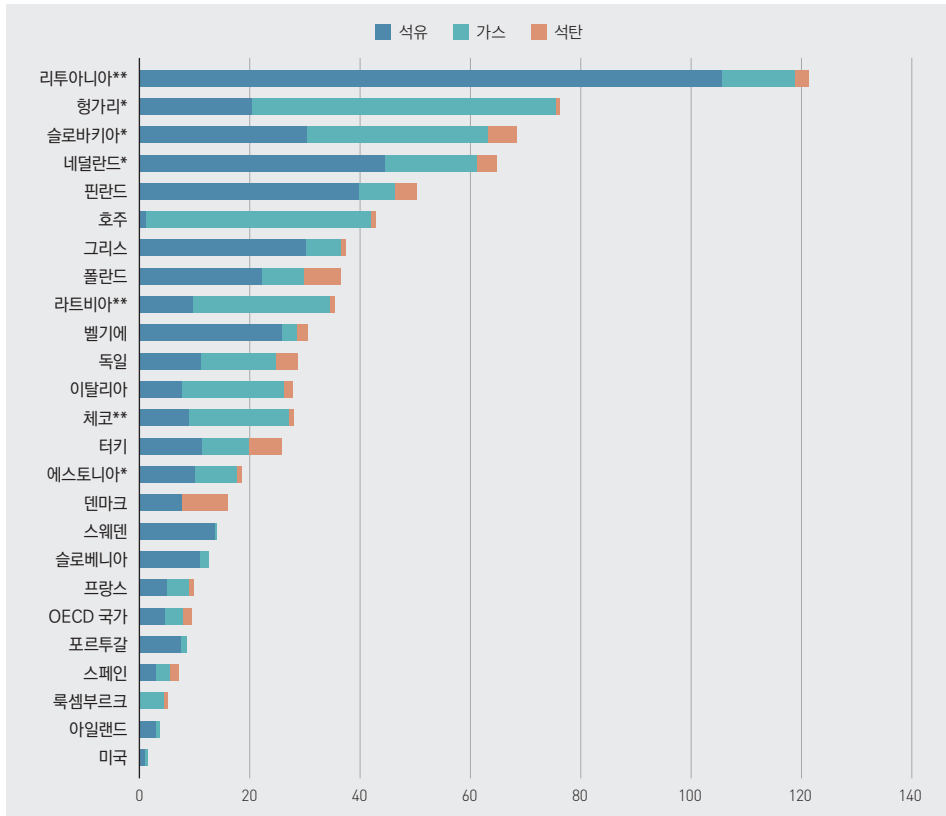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에너지 가격 추가 상승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비용 관리, 가격 신호³ 왜곡 방지를 위한 일정 기간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세율을 낮추거나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은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연료 부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현금지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면 더욱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지만, 적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전쟁은 OECD 국가들이 화석 연료에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그림 6). 최근까지 유럽으로 수입되는 천연가스가 40% 이상이며, 석유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³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 또는 하락시키는 경제적 정보의 일종.

〈그림 6〉 공급되는 총 에너지 대비 러시아 수입 비율(2019년)

(단위: %)



주: *국가는 통과무역 포함, **국가는 비축량 포함

자료: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12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OECD는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안했다.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장려책을 제공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왔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2022년에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는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자 내년에는 가스 수입을 1/3에서 1/2로 줄일 수 있는 10가지 중점 계획을 수립했다. 유럽에서는 전기 그리드를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안보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방법의 취약성을 줄이고 넷제로(Net-zero)에 필요한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둘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가격상승의 영향을 줄이려면 다수의 국가가 에너지 가격 인상을 완화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OECD 국가가 식품 생산량을 늘리고,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며, 물류를 다자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전쟁의 공급 차질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누구의 눈에 맞추어 재정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자료 분석 사례

글.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기업특별회계는 국가의
공기업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로서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된다. ”



공공데이터는 근거기반정책을 위한 기본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산집행률과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 재정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고, 세부 사업의 예산집행의 흐름을 분석하여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은 예산의 규모와 재정수지 흐름을 보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고,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 재정정보를 제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당연히 달성되는 것일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플랫폼들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왔다. 이런 공급주도의 공공데이터 제공방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번 호에는 열린재정의 재정분석통계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고자 하자. 이곳에 가면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회계유형이 구분되어 있다. 왜 이렇게 회계

유형이 구분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분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재정전문가는 많지 않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무수히 많은 특별회계를 왜 굳이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기타특별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특별회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특별회계처럼 보이고, 기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중에서 아주 특수하고 중요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어쩌면 옛날에 사용하던 회계유형의 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¹.

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자본계정과 손익계정으로 구분된다. 자본계정은 자본계정이고 손익계정은 손익계정이라는 동어반복적인 설명을 넘어서 자본계정과 손익계정이 기타특별회계에서 무슨 의미인지 열린재정에는 제공되지 않지

¹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1921년 총독부법령 「회계법」, 이 법을 승계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업특별회계 구분의 시초는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으로, 특별회계에 의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회계원칙의 근거법령으로 「정부기업예산법」(제정 당시 「기업예산회계법」)을 동년에 제정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받는 특별회계는 법 제정 당시 5개(교통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양곡관리, 조달)로 하고 그 외의 특별회계를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했는데, 이는 개발시대 당시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담은 것이다. 개발시대 기업특별회계의 위상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1970년을 예로 들면 순계 기준으로 6개 기업특별회계 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내국세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특별회계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었으므로 특별회계를 기업특별회계와 기타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분이었다. 기업특별회계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진 현대 시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도, 도시개발 등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와 별도 관리하는 등 현대에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만,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상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기업특별회계는 국가의 공기업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로서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된다. 손익계정은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의 관계를 표시해 주고, 자본계정은 시설투자나 자산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형성과 자산의 증감상태를 나타내준다.”²

그런데 자산의 증감상태와 자본형성을 동시에 살펴본다는 의미는 좀 의아하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인데 자본계정이 어떻게 자본계정과 자산증감을 살펴본다는 것인지 의미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는 민간 회계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영업, 판매, 임대 등 매달 또는 매년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손익계정으로 구분하고,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의 형성 또는 매각 및 관련된 부채 취득 등 주로

투자활동과 관련된 부분의 수입과 지출을 자본계정으로 구분한 것이다. 과거 IMF 등에서 제시한 정부재정편람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형성과 관련된 비용을 자본지출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를 주로 권고했는데 자본과 자산, 즉 저량을 현금흐름, 즉 유량과 구분하는 현대의 발생주의 회계 방식과는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본계정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손익계정에서의 세입과 세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본계정에서의 이월액과 불용액의 의미는 무엇인가? 손익계정에서의 세입은 기업특별회계의 자체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대변과 차변에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손익계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그대로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또는 영업이익으로 계산된다. 반면 자본계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로 자산취득, 부채의 취득과 상환과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면 건물을 취득하거나 짓는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계정의 수치차



를 그대로 영업이익에 반영하면 해당 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초 계산한 영업이익보다 실제 발생한 결산 영업이익이 많으면 초과 영업이익을 직접 당해 연도에 자본계정으로 융통하여 투자비로 지출할 수 없으므로 이월, 전용을 통해 차년도 영업 및 투자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당초 예산으로 계산한 영업이익보다 결산 영업이익이 적을 때 세입 부족으로 인한 투자사업비(자본사업) 불용처리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다³.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자료가 가진 이런 복잡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누구의 눈에 맞추어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공공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성 때문이다. 고객의 눈에 맞추어 데이터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메타데이터(Metadata) 제공의 중요성이다. 많은 시민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어떻게 수집했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각 변수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시민의 눈에 맞추어 변수의 정의, 측정방식, 해석상 유의점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KOSIS나 e나라지표 등에서 자료를 제공할 때 이러한 메타데이터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으니 이를 참고할 만하다. 좋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는 위험을 높인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라는 변수를 볼 때 산출량 중심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이 서로 다른 측정 방식이 가능하다. 각 접근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노동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제공해주면 잘못된 자료 분석과 해석의 위험성이 커진다.

둘째, 데이터 사용자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사용자 그룹은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JSON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친숙한 EXCEL 형식의 데이터를 받고자 한다. 또한 재정분야 전문가가 재정정보원의 재정데이터와 각 부처의 인력정보나 재정사업 자체평가 및 각종 성과지표를 연결하는 데이터를 얻고자 할 것이다. 결국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는 데이터 제공자의 지속적인 수요 파악이 전제되어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URL: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3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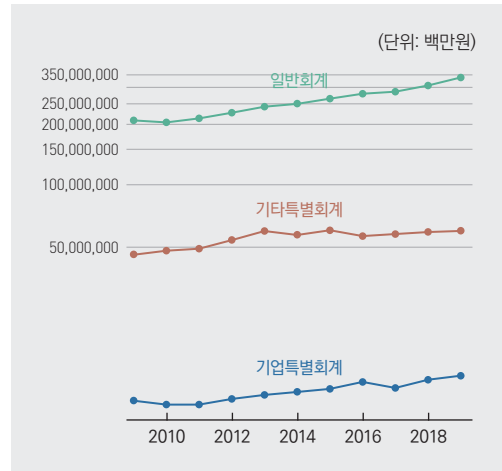
3 이러한 기업회계의 원칙은 1960~1970년대의 정부활동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다. 현재는 정부의 활동에서 흑자가 난다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개발시기 당시 전매사업특별회계(현 KT&G)를 예로 들 때 담배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만으로도 당시 한 해 법인세액보다 많았고, 절반 이상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는 당시 조세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그리고 초과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법적으로 차년도 세입에 이입 즉 이월하는 것도 법적으로 당연히 허용되었다.

셋째, 친절한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 재정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데이터를 살펴 보다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실제 정책에 활용할 지를 자연스럽게 고민한다. 따라서 제시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한 사례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친절한 데이터 사용설명서와 분석 사례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데이터 제공을 넘어서 콘텐츠 제공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자료 분석으로 넘어가 보자. 열린재정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는 재정분석통계용어 사전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전에는 자본계정이나 손익계정의 의미 등 메타데이터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다운받으려고 해도 JSON 방식의 API 코드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저자의 경우는 프로그램 코드를 짜서 해당 자료를 받아야 했다⁴. 한편 이 자료에서는 회계유형을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에서 분리되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일한 홈페이지임에도 자료를 다운받는 페이지마다 회계를 구분하는 기준 즉 데이터 표준이 다르고 메타데이터에도 설명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현액기준으로 하면 <그림 1>과 같이 일반회계의 규모가 당연히 가장 크지만, 기타특별회계도 50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예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증가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회계유형별 세출예산 규모(현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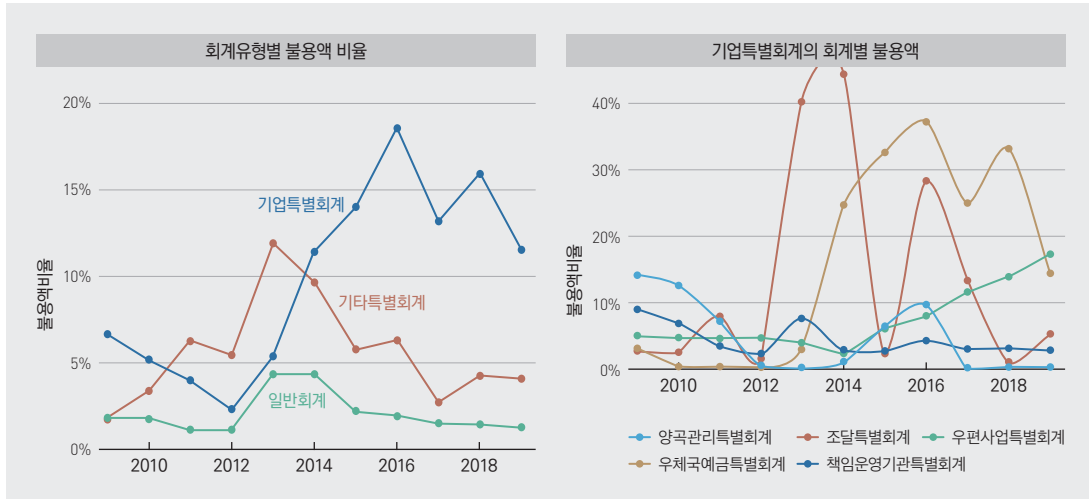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Powered with SAS

그렇다면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에서 예산 불용액⁶의 규모가 큰지를 분석하고자 할 것이며, 세부사업 혹은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불용액 분석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이런 분석 사례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데이터, 연구보고서, 혹은 분석 코드를 제공해준다면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연관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회계유형에 따른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간단한 불용액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 예산 불용액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2>처럼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 수준 밖에 안 되지만 기업특별회계는 꾸준히 불용액의 규모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1.6%에 달한다. 이것은 기업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인 항목을

〈그림 2〉 회계유형별 불용액 비율과 기업특별회계의 회계별 불용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Powered with SAS

살펴보면 〈그림 2〉의 오른쪽처럼 조달특별회계와 우체국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2012~2014년의 조달특별회계의 불용액이 40% 이상으로 높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눈에 맞추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제공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메타데이터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제공하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매년 자료가 축적될수록 엑셀 형식의 자료보다는 API 기반 자료 공유의 기술적 표준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기술적 표준도 공급자 입장이 아

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사례를 만들어서 수요자가 어떻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사용자의 눈에 맞춘 재정데이터 플랫폼 구축 노력이 근거 기반정책과 공공데이터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재정정보원을 만들어갈 것으로 믿는다.

4. 자료는 열린재정> 재정분석통계> 재정보고서> 결산개요>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참고.

URL: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odtId=0V870Y402T07Y4SM750JUJISO>

5. 입력된 자료에서 회계항목 구분에 있어서 일부에는 항목 이름에 공백이 있어서 자료분석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6.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서는 불용액비율을 불용액/세출예산현액으로 측정했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글.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며

거액의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공항이라든가 전국 단위의 하천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43조)에서는 경제성분석을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성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같은 법에서 예타와 관련된 의무규정과 더불어 공공청사, 문화재복원사업, 국방관련사업,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동법 제38조 제2항)도 더불어 제시되고 있다. 예타 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이와 같은 면제조항이 있어 더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과거에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들도 다시 면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규정(같은 조항)까지 있다 보니 논란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타와 관련된 이러한 많은 논란의 밑바닥에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서 재정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이 문제 또한 앞의 연재 글들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 내지 경제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개인을 중시하는 견해와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개인을 중시하는 견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초기의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그들을 이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공공경비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해버림으로써, 재정학의 주된 관심을 납세자들의 희생이 최소가 되도록 조세를 부과하는 문제로 집중시켰다. 신고전파의 마지막 학자로 일컬어지는 Pigou에 오면 조세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공공경비는 다양한 공공사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경비 규모는 공공지출의 한계편익과 민간지출의 한계편익이 일치하도록 정해져야 효율적이라는 규범적 틀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¹.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규범적인 조건을 넘어 구체적으로 공공사업들의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나아가 이 두 측면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

¹ A. C. Pigou. (1947). A Study in Public Finance, 3rd ed, p.31 참고.

² R. A. Musgrave. (1969).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7(3), p.797; "A Brief History of Fiscal Doctrine," A. J. Auerbach and M. Feldstein(eds.). (1985).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I, pp.11-12 등을 참고.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고전파로부터 Pigou³에 이르는 신고전파 논자들,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 전통과 맥을 같이 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논자들은 개별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같은 실천적 분석 개념은 애초부터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기본 틀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을 수용한 Samuelson, Musgrave 등에 이르면, 민간재와 공공재가 동시에 병존하는 세계에서 전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로 논점이 옮겨졌다. 이들에 이르러 재정학 영역에 공공재 공급이라는 지출 부문이 본격적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공공재와 민간재를 전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재정학에서 경비 부문이 조세 부문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이론적 계기를 만들었다.⁴ 이들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일반균형은 해당 사회의 사회후생함수의 존재를 전제로, 선의의 관리자가 찾아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도출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 틀에 바탕을 두고 공공재 공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기회비용으로서 조세를 실제로 개인들에게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재는 그 물리적 속성상 선호를 나타내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숨어있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 표명(조세지불의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 과정이 필요한바, 결국 선의의 관리자의 현실적인 정책적 과제는 이와 같은 투표 과정을 어떻게 구상하여 효율적인 가격 결정 틀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규범적 논의로는 실제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예산 결정의 문제에는 어떠한 지침도 주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실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용적 용도로 등장한 것이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이다. 이는 시장실패 문제를 수용하는 개입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는 관료 내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결정을 위한 분석 수단으로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공공사업의 공급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서 그 ‘순편익’ 또는 ‘편익/비용 비율’ 등을 계산하여 해당 공공사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공사업인 만큼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발생시키는 진정한 기회비용으로서 ‘잠재가격(Shadow Price)’을 측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비용이

³ Pigou도 위와 같은 공공부문 운영의 일반적 원리 맥락에서 외부성의 존재와 같은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문제를 개선하는데 정부 역할을 허용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그는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틀 안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신고전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⁴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특정 공공재 공급의 기회비용이 곧바로 민간재 공급의 감소(조세 부과)라는 형태로 양 부문이 상호 유기적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균형문제를 다루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호에서 소개한 P. A. Samuelson(1954; 1955)과 R. A. Musgrave(195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나 편익을 발생시키는 만큼 그렇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도 찾아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의 이면에는 선의의 관리자 내지 그들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공공사업이 발생시킬 사회적 기회비용으로서의 잠재가격이나 사회적 할인율 등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분석은 전형적인 케인지언류의 개입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양적 목표치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수행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방법을 써서라도 경제성 분석을 통해 공공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일컫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라 일컫는 것이 그것이다. 어쨌든 개입주의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바탕을 둔 선택행위의 기본 틀을 수용하면서도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공적 개입을 통해 그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그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분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

한편 우리는 앞에서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에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중시하는 견해와 사회문화적 배경과 제도를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가치 기준으로서 ‘가격’을 재화 또는 용역에 내재된 ‘가치’와 구분하여 파악하는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고의 주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⁵⁾

앞에서 살펴본 개인 중시 견해 중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개입을 수용하는 견해는 비용이나 편익이 해당 공공사업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경제문제 설명에 있어서 사회의 전통이나 사회문화적 배경과 제도를 중시하는 논자들(이하 ‘제도론자’)은 비용편익분석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앞의 개입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⁶⁾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개입주의자들은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사회적 기회비용

⁵⁾ 이들의 가격과 가치의 차별성과 관련된 논의는 노동가치설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⁶⁾ 이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제도론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A. Allan Schmid. (1994). "Cost-Benefit Analysis," Geoffrey M. Hodgson, Warren J. Samuels(eds.). The Elgar Companion to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A-K, Edward Elgar를 참고하기 바란다.

을 반영한 잠재가격이라 하여, 그 가격으로 비용편익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해 제도론자들은 ‘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한 사회의 여러 제도들 중의 하나로 파악하여,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형성되지 않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집합적 의지가 반영되어 공적으로 결정된 인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⁷. 말하자면 한 사회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도 사회나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의 개입주의자들은 시장가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사회적 기회비용, 즉 잠재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찾아서 분석해야 진정한 경제성분석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론자들은 잠재가격이라는 것도 특정 공공사업을 해당 사회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정치가들이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물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회비용을 파악하려는 경우 어느 계층의 기회비용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속성만 가지고는 파악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측정 과정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할인율’도 개개인의 사적 가치를 중시하는 앞의 논자들은 관련된 시장이 완전한 경우 물리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제도론자들은 사회적 할인율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선호율을 알아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이나 집단마다 시간선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느 개인 또는 계층의 시간선호율을 중시할지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통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한다.

결국 이들 입장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사회적 기회비용이라든가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공공사업이 그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 나아가 해당 공공사업의 규모나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정해진다고 보고 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어 있는 전통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잘 부응하는지 아니면 특정 계층의 이해에 부응하는지에 따라, 해당 사업이 그 지역사회의 경제성 성과에 주는 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을 관료나 전문가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측정해서는 해당 사회의 특성을 담아낼 수 없다고 본다. 즉 이들은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도 일률적인 기

⁷ 나라마다 그와 같은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어느 나라는 총기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형성되지 않기도 하며, 마약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형성되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준에 의한 분석에 의지하기보다는 해당 공공서비스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집합적 의사결정과정⁸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⁸.

3. 나오며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정부의 공공사업 수행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한다면 경제성을 어떻게 따져서 수행해낼 것인지 등의 문제는 무엇보다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았다. 여기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공공사업을 수용하고 경제성분석을 받아들이는 위의 견해들도 경제성분석의 시행 주체를 두고는 결정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개별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개입주의적 견해는 현실적으로 시장실패 보정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수행을 수용하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할 때 관료나 전문가들이 공공사업의 비용편익을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논자들도 실제 공공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때 경제성분석 이외에 다른 정책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요인도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론적 견해에서는 경제성분석 자체가 사회적 조건 내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공공사업 수행의 타당성 판단 과정에는 사회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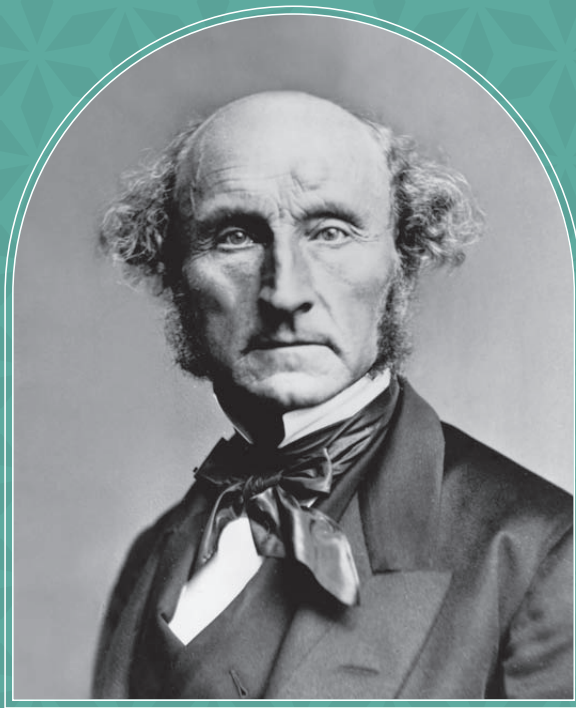
본고를 통해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하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과 관련된 재정활동도 바람직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입장이 타당할지는 의사결정자 개인의 인식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공공사업이 특정 사회구성원들의 실제 생활 과정에 주는 사회경제적 성과라는 맥락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사실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⁸ Sönderbaum 같은 이는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측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eter Sönderbaum. (2017). “Strategies in relation to complexities: From neoclassical Cost-Benefit Analysis to Positional Analysis,” Keynote address, WEA Online Conference, 2nd Oct. to 30th Nov. URL: <http://economicphilosophy2017.weaconferences.net/>을 참고하기 바람.

사회철학자, 분배정의론 존 스튜어트 밀의 재정사상



글. 김의섭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재정정책학회 명예회장



Mill's Fiscal Thought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년

밀의 생애 및 학문 여정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년)은 19세기 영국의 뛰어난 지식인이었다. 그는 공리주의 철학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상(Democratic Liberalism)을 지녔고 사회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는 경제학에, <자유론>과 <대의정부론>은 정치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여성의 종속>은 남녀차별 극복과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경제학을 창립하고 발전시킨 애덤 스미스, 분배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 이후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학과 경제학 및 사회철학을 모두 이해한 최후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자였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년)은 그 당시 저명한 학자이었고 데이비드 리카도와 절친한 학문적 동료이었고,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 사상을 신봉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에 의해 조기 영재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의 나이 3세에 희랍어, 여덟 살에 라틴어 및 미적분과 수학을 공부했으며, 열세 살이 될 때 아버지 제임스 밀은 아들 밀에게 스미스와 리카도 경제학을 가르쳤다. 제임스 밀은 아들에게 경제학을 설명했고, 밀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제출해야 했다.

1822년 봄,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밀은 벤담의 공리의 원리에 접하게 되며, 그 이후 밀은 공리주의자가 됐다. 벤담은 인간은 이기적이며 권력, 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공리주의 이론을 주장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표현되는 공리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아버지,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영국 사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철학적 급진주의자(Philosophical Radicals)'로 활동을 하며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정,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던 그는 20세의 나이에 무기력과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며 청년 시기의 위기를 경험했다. 이러한 정신적 위기 상태에서 밀은 25세가 되던 1830년 헤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1851년 결혼을 했다. 헤리엇은 남편과 두 명의 자녀를 두었던 유부녀였지만 밀에게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 밀의 저술 활동에 조언을 하며 학문적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 인생에서 지적 동반자인 헤리엇을 만난 이후 밀은 과거 자신이 지녔던 벤담주의를 개량하여 새로운 사회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새로운 사상의 밀은 '넓은 벤담주의'를 개량하여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쾌락이나 이기적 활동에 있지 않고, 그 이상의 더 높은 것인 심미적이고 도덕적 감정에 의존한다는 '새로운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밀은 인간이 단순히 쾌락만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의 본성이 더 복잡한 심리를 지니고 있고 행복은 더 높은 가치인 사회적 협력, 정의, 평등, 명예에 의해 결정된다고 역설했다. 밀은 사회적 협력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지녔던 좁은 이론의 넓은 공리주의를 개량하여 더 폭넓은 철학과 새로운 공리주의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

밀은 분배의 법칙은
인간과 사회가 만든
제도와 법률 및
사회적 관습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라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

밀은 1860년대 영국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회철학과 정치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인권의 존엄성을 주장하며 여성과 빈민들의 권리 증진과 정치참정권을 역설했다. 그러던 밀은 1873년 세상을 떠나서 그의 아내가 묻혀있는 프랑스 아비뇽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

존 스튜어트 밀은 1848년에 그의 역작인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를 출간했다. 그가 저서를 쓴 목적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회에 대한 실용적 인식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연역적 분석을 접목시켜 고전파 정치경제학을 정립시키는 것이었다.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는 생산, 분배, 교환, 경제발전, 정부의 역할 등 5편으로 구성되었다. 밀은 정치경제학의 연구 주제로 생산과 분배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저서에서 생산의 법칙(Law of Production)과 분배의 법칙(Law of Distribution)을 구분했다. 밀은 생산의 법칙은 생산요소 투입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불변적 현상이며 자연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밀은 분배의 법칙은 인간과 사회가 만든 제도와 법률 및 사회적 관습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라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밀은 그의 저서 1편 생산 이론에서 스미스의 노동 분업이론을 받아들였으며 생산 증진에 따라 산업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자연독점 문제가 발생하며, 농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생산이 유리하다고 서술했다. 또한 밀은 저서의 2편 분배 이론에서 부의 분배가 제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분배는 사회의 법과 관습에 의존한다고 서술했다.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밀은 사적 재산권에 의한 과도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재산권의 과도한 남용 억제를 위해 누진적 상속세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저서 3편 교환이론에서 밀은 정치경제학이 교환과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미스의 가치이론인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언급하면서 화폐를 포함한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는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밀은 4편 경제발전 이론에서 모든 국가는 문명화로 부의 증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견했다. 그는 경제성장 또는 문명화는 기술 혁신, 개인 재산권의 지속적인 확대, 노동자와 기업 간 협력의 지속적 증진 등으로 가능하여지며, 인류 미래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유토피아(Utopia)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밀의 저서 초판은 1848년 4월에 발간됐고 인쇄된 1,000부가 첫해에 모두 판매됐다. 다음 해 1849년 2판이 출간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간행되어 1857년 7판의 개정판이 인쇄됐다. 고전파의 정통적 경제이론과 리카도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적으로 그의 저서는 영국과 미국의 대학교(Anglo-American Universities)에서 경제학 연구의 성서처럼 읽혔고, 강의 교재로 활용됐다. 189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마셜(Alfred Marshall)



의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출간될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는 영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경제학의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됐다. 훗날 밀의 저서를 예찬했던 경제학자는 마셜의 〈경제학 원리〉가 밀의 사회 철학적 경제사상에 고작 수학과 미적분의 방법을 덧붙인 연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밀의 재정 사상과 정부 역할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 제5편(Book V)에서 재정 사상, 정부의 역할, 조세이론에 대해 서술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가 지녔던 자유방임주의 사상(Laissez Faire)을 이어받았다. 밀은 그의 저서에서 “자유방임주의는 전반적인 정부 활동의 기준으로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에서의 이탈은 확실한 죄악이다”라고 주장했다.

밀의 재정 사상은 자유방임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그는 사회적 선의 증진을 위한 예외적인 다양한 유형의 정부 개입과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밀은 경제사회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았다. 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적 시장경제가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부 개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첫째, 밀은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재분배정책과 조세정책의 시행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통해 모든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도덕적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밀은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서 부와 자산의 불공평과 불평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부와 자산의 상속에 대한 누진적 조세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둘째, 또한 밀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빈곤한 가계가 자신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그 예로 밀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 가계 자녀들의 국가 무료 교육이나 공적 자금 지원 등과 같은 정부 활동을 제안했다.

셋째, 밀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별 노동자가 자본가와 협상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의 권한을 인정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들의 과도한 노동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 노동 시간을 하루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넷째, 밀은 자연독점 문제를 인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이 형성되면 사회에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독점 기업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독점 초과 이익을 억제하는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밀은 사적 부문인 개인의 활동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공공주택, 철도, 공공재인 등대, 도로와 공적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부 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공적 욕구들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공적 편익의 혜택에서 배제 시킬 수 없는 특성을 지녔고, 무임승차(Free-Rider)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논술했다.

밀이 그의 재정 사상의 일반적 원칙이었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의 예외로 다수의 수많은 정부 활동을 인정한 것은, 그의 정치경제 사상의 복잡성을 나타낸다. 밀은 경제사회가 경쟁적 시장과 정부 개입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사회적 선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복잡한 자유방임주의적 재정 사상을 지녔다.



밀의 조세이론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조세원칙론으로 납세자들이 개인의 조세부담 능력(능력설)과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의 크기에 비례(이익설)하여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 제5편에서 조세원칙론으로 스미스의 능력설을 받아들여 희생설(Equal Sacrifice Rule)로 발전시켰고, 이익설을 부정했다. 그는 오늘날 조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희생설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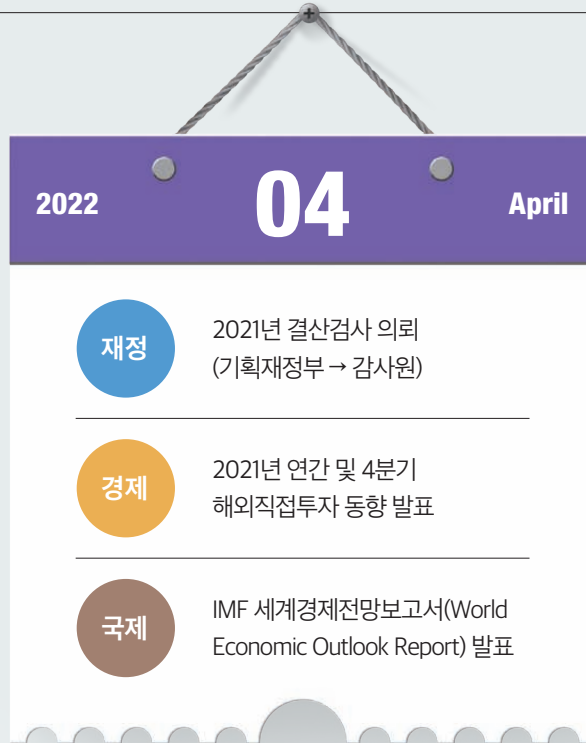
밀은 정부가 존재하면 재정 활동에 필요한 수입을 조세로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조세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지녔다. 그의 조세론에 의하면 특정한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부담 몫보다 적게 세금을 내면, 그 부담의 몫이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은 공정한 조세원칙론이 각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과 후생의 손실 크기가 동일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은 납세자의 희생의 크기가 절대 균등 희생, 평균 균등 희생, 한계 균등 희생 가운데 어느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밀은 모든 납세자가 법률적으로 조세부담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최소한 소득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다. 밀은 최저 소득수준 이상으로 노동이나 저축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추가적 소득에 대해서 비례세율 조세(Proportional Taxation)를 부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지 않는 비생산적 잉여 소득(Surplus Income)인 상속, 증여, 지대, 자본이득(Capital Gains) 등에 대해서 높은 누진적 조세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밀은 기본적 생계비 소득수준 이상의 납세자들이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의 크기가 동일하여야 공정한 조세 부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부의 증진과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비생산적 활동을 억제시키고 노동과 저축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밀은 조세론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서술했고, 그의 연구는 조세론을 최초로 후생경제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기여를 했다.

밀은 최후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자이었고, 밀 이후 경제학은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며 한계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됐다. 밀은 공리주의 철학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지녔던 뛰어난 사회철학자이며 고전파 정치경제학자이었다. 그는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분배정의를 옹호하며 정의로운 경제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역할과 조세정책에 대해 연구했다. 밀의 저서가 출간된 이후 17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밀이 고민했던 빈곤 문제, 노동문제, 분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21세기 현재에도 밀이 꿈꾸었던 이상향(Utopia)의 ‘정의로운 경제사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Fiscal Calendar



January 01

재정

- ▶ 2023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 2021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 통계청 2021년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 ▶ 2021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 2021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 한국은행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발표

March 03

재정

- ▶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 한국은행 2021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July 07

재정

- ▶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 통계청 2022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August 08

재정

- ▶ 20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 통계청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재정

- ▶ 2023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1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기획재정부 3.23.)

- 2021년 해외직접투자액은 758.7억불로 전년(571.3억불) 대비 32.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 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도 584.2억불로 전년(422.9억불) 대비 38.1%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
- 이는 전 세계 백신 보급 등에 따른 팬데믹 우려 완화로 2분기부터 투자가 회복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였기 때문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억불, 전년 대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투자(A)	404.7	450.2	514.6	648.5	571.3	758.7
증감률	(33.2)	(11.2)	(14.3)	(26.0)	(△11.9)	(32.8)
회수(B)	102.1	95.9	97.9	136.5	148.4	174.5
순투자(A-B)	302.6	354.3	416.7	512.0	422.9	584.2
증감률	(37.8)	(17.1)	(17.6)	(22.9)	(△17.4)	(38.1)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발표(기획재정부 3.29.)

- (동향) 한국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
- (전망) 2022년 성장률 3.0%, 물가 3.1% 예상,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 전망
- (정책평가 및 권고) 정책정상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포용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평가권고

April

04

재정

- ▶ 2021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 2021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국제

-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재정

- ▶ 2023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 2021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 2021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 통계청 2021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 통계청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경제

-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국제

-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경제

- ▶ 통계청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재정

- ▶ 2023년 예산 확정

경제

- ▶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1 한국재정정보원, 「FIS 이슈 & 포커스」 통권 제1호 발간

한국재정정보원은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이슈 및 쟁점을 심층분석하여 재정당국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FIS 이슈 & 포커스」 통권 제1호를 발간했다. 「FIS 이슈 & 포커스」 통권 제1호는 '우발부채'를 주제로 우발부채의 개념 및 용어 정의,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현황 소개,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내용을 다뤘다.



2 한국재정정보원, 식목일 기념 지역사회 나무돌봄 캠페인 추진

한국재정정보원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지역사회(남산 인근) 산림자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생태공간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했다. 경영기획본부,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재정정보분석본부,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정보보호본부, 고객지원단 6개 본부의 임원 및 환경지킴이 등 본부별 자원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남산 인근 한강대로를 포함한 5개 노선에서 4월 한 달간 일반녹지대, 쉼터, 띠녹지 등의 생태공간을 정화하고 관리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3 한국재정정보원, 산불 피해지역 국고보조금 맞춤 서비스 지원

한국재정정보원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동해, 삼척, 울진지역에 국고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사용법 상담 및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강원도만 따져도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만 8천여 종의 보조사업과 4조원대 보조금(급여형 포함)이 배정돼 있지만, 이 중 사업형 보조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교부·신청·집행·정산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정보원은 4월 25일부터 이들 지역에 e나라도움 사용법 문의 전용 전화 상담을 운영해, 국고보조금이 신속하게 배정·집행될 수 있도록 돕고, 해당 지역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 맞춤형 방문교육을 제공한다. 공무원이나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국고국고)로 전화해 ARS 안내 중 '0번 산불 재난지역'을 선택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재정정보원-한국정책학회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은 4월 20일(수), 한국정책학회와 양 기관의 '재정정보 분석 기반 확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정보의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재정분석 성과 향상 및 학술 발전 △재정분석 및 연구 과제의 발굴·수행 노력 △재정정보 활용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활동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5 대전지역사무소, 대전광역시 국고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3차 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국고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국고보조금의 주요 제도 및 내용과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교육으로 실시했으며, 본 교육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데이터 공개

💡 상세한 재정자료가 필요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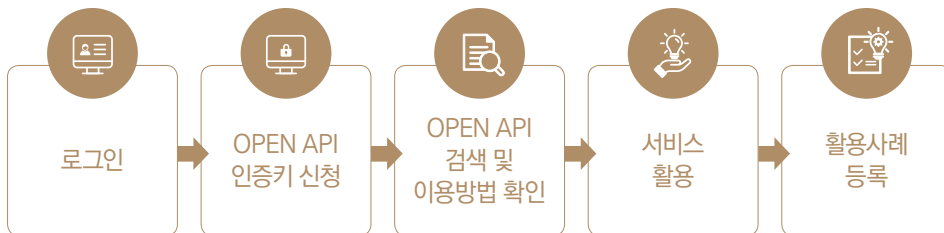
열린재정, 전문가 및 연구자에게 필요한 재정자료 제공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서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정보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OPEN API 인증 이용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를 웹 또는 모바일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열린 재정 OPEN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인증키를 발급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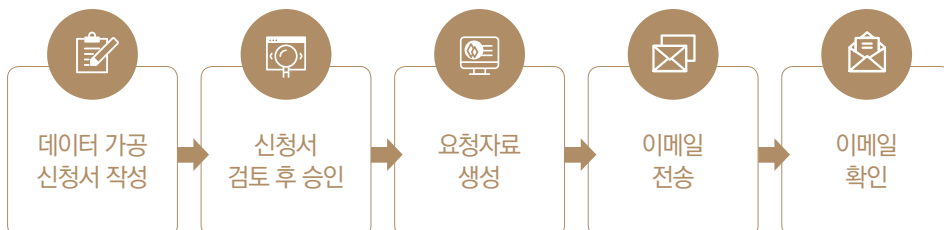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데이터 공개 → OPEN API → 인증키 신청(최초 1회만 신청)



② 재정데이터 신청

열린재정에서 데이터 가공 신청도 가능하다. 데이터 가공 요청은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이메일로 제공한다(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제공).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데이터 신청 → 데이터 가공 요청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정보 공개

세입/세출, 재무제표, 국유재산, 물품, 채권, 결산보고서 등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해 주세요.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독자 QUIZ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대외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업화를 통해 국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답

자 립 화 기 술 개 발 사 업

독자편지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cho***** 

<이달의 재정 이야기> 코너를 통해
'녹색전환'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 수 있는
녹색전환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내야 할
최고의 가치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 기간 2022. 4. 29 ~ 2022. 5. 15.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 hon*****@naver.com
- com*****@gmail.com
- miy****@naver.com
- yrs****@kakao.com
- kjp****@gmail.com
- eas*****@hanmail.net
- 372****@naver.com
- ehd*****@naver.com
- abc*****@naver.com
- cho*****@naver.com



한국소아암재단

매년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모든 소아암 환아가
새 생명을 얻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배우고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백만 천사가 되어주세요.

괜찮아,
다 잘될 거야!
덕분에,
오늘 이식을 받아요.



(재)한국소아암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어린이 및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후원 문의 : 02-3675-1145~6
이 메 일 : soaam9191@naver.com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0401-04-025956
(재)한국소아암재단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재)한국소아암재단 무료 광고입니다.